

광주 신규사업 32건 안정적 국비확보 기틀 전남 핵심 SOC사업 빠져 미래 성장 빨간불

■ 광주·전남 내년 살림 어떻게 반영 됐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시는 32건, 422억원 규모의 신규사업이 반영되면서 앞으로 총 1조1900억원의 국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반면 전남도는 총 국비지원액은 다소 늘었지만, F1대회 운영비와 무안 공항 확장,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 건설 등 핵심 현안사업들이 국비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면서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광주시=내년도 주요 핵심 사업으로 중점 관리해 온 7개 사업(총 사업비 6529억원)이 모두 국비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의 증권거래소, 부산의 선물거래소와 함께 금융의 3각축 형성을 통해 지역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동북아 상품거래소' 설립 용역비 2억원, 5·18기록물을 체계적으로 영구 보존하기 위한 '5·18아카이브' 구축비 30억원이 반영됐다. 또 상무소각장 폐쇄의 전단계로 진행

되고 있는 '폐기물전처리시설(RDF)' 건립비 30억원, 외국인 기업 유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확대' 조성비 30억원이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고부가 가치산업으로 각광받은 '3D융합산업 육성' 15억원, '클린디젤자동차산업 육성' 100억원' 등도 정부예산안에 반영됐다.

분야별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비 576억원, 아시아 문화산업 투자조합 설립비 30억원, 2015 광주국제U대회 지원비 234억원 등 30건에 1218억원이 국비지원 목록에 올랐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R&D사업으로는 광주 R&D특구설립 50억원, 광주 제2컨벤션센터 건립 132억원, 전통시장시설현대화 90억원 등 30건에 1921억원이 반영됐다.

복지 및 생태공동체 구현을 위한 사업으로는 호남권역재활병원 건립 25억원, 어린이전문병원 건립 25억

원, 음식물류 폐기물자원화시설 80억원 등 26건에 7354억원이 포함됐다.

SOC확충사업으로는 국가지원 지방도 154억원,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설 197억원, 일곡~용전간 도로확장 50억원, 화물공용차고지 조성 88억원 등 34건 9663억원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남도=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의시 신규 사업 자체 방침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분야에 빚어진 국가산단 진입도로 개설(20억원) 등이 반영되고, 보건·복지 분야에서 통합건강센터 지원(20억), 한국 토종자원 한약재 기반육속사업비(10억원)를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위해 요청한 예산(109억)이 부처예산(20억)보다 50억 증액, 70억으로 늘어났고 순천만 그린에너지 정원조성(20억) 사업 예산을 확보한 것도 성과를 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가 핵심 현안으로 추진중인 상당수 사업 예산이 미반영됐다.

전남도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한 F1(포틀러원)

코리아그랑프리 대회 운영비가 전액 삭감되면서 내년도 대회 개최에 비상이 걸렸다. 전남도의 최대 현안 사업인 F1 대회의 경우 2012년 F1 대회 개최를 위해 요청했던 300억원이 한 푼도 반영되지 못했다.

박준영 전남지사가 친환경 사육환경 조성을 통한 구제역과 AI 선제적 예방을 위해 요청했던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예산 720억도 전액 누락됐다. 사육환경을 동물복지에 맞춰 개선하는 등 가축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친환경 축산 정책도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광주~완도간 고속도로(1000억) ▲안해~화원 연결도로(100억) ▲하의~신의연도교 개설(100억)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 건설(100억) 등도 전액 미반영됐다.

무안공항 활성화 및 여수세계박람회 교통 대책을 위해 추진했던 무안공항(200억) 및 여수공항(200억) 확장 사업비도 부처 예산안에 빠져면서 정부 예산안에서도 누락됐다.

/홍행기·김지용기자 redplane@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사업

광주·전남 국회의원 예산 공조 ... 이것만은 꼭 챙겨라

F1운영비·친환경축산·해저고속철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확정하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현안 사업 예산이 상당 부분 누락된 것으로 알려져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과거와 같은 부실한 예산 공조의 틀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책임 논란 등이 이슈로 부상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물갈이론'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일단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한 광주·전남지역 대형 현안 사업은 10여건으로 집계되고 있다.

광주는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동광주 IC~광산 IC 고속도로 확장사업비가 국비에서 누락됐으며 광주 R&D 특구 지원비 등은 요구액의 상당 부분이 삭감됐다.

광주시가 요구한 내년 예산의 경우, 차세대 방사광 가속기 유치 사업을 제외하고는 국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일정부분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기정 의원이 민주당 계열위원간사인 데다 예산통인 장병완 의원이 예결위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광주 국회의원들의 상호 신뢰지수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원만한 협조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전남은 내년 F1(포틀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 운영비, 친환경축산 지원 사업, 첨단수출원예단지 조성사업, 국가비행중합시험센터 설립, 우주로봇연구센터 설립, 양식 섬 조성사업 등이 전액 누락됐다.

여기에 광주~완도간 고속도로, 안해~화원 연결도로, 하의~신의연도교 개설, 장성 나노산단 진입

도로 개설, 호남~제주 해저고속철 건설 사업 등 전남의 핵심 SOC 사업 예산도 줄음이 누락됐다.

문제는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에서

서 누락 사업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 그동안 전남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사업 챙기기에 적극 나섰지만 전남 전체의 미래를 견인할 수 있는 대형 현안사업에는 좀처럼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남 일부 국회의원들은 전남도의 부실한 예산 협조를 공공연하게 지적하고 있는 반면 전남도는 지역 정치권의 부실한 측면 지원에 섭섭한 심경을 토로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예산 공회를 앞두고 광주시와 전남도는 내년도 국고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 정치권과 보다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도 상임위와 예결위원의 굳건한 공조 체계를 구축, 국회 차원의 예산 확보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이명박 정부 2012년 예산안 vs 민주당 요구안 비교표]

구분	이명박 정부 예산안	민주당 요구안
성격	'태평성대 예산'	'위기극복 예산'
일자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창출 예산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창출 예산 · 11년 2.3조 → 12년 2.5조(1375억원 증가) · 11년 541만명 → 12년 562만명(21만명 증가) *109802명 → *115622명 → *12562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자리 창출 예산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창출 예산 · 11년 2.3조 → 12년 4.5조(2조원 증액 필요) · 11년 541만명 → 12년 802만명(261만명 이상 창출 필요)
중소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육성이 핵심 신보·기보 여유자금 5000억원을 일반회계 사업자금을 으로 역전출 *예금은행 중소기업 대출 증감 추이 *10766.8조 → *0851.4조 → *0919.9조 → *10·28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육성이 핵심 신보·기보 여유자금 5000억원은 중소기업 지원 용 으로 유지 보전 신보·기보 5000억원 추가 출연
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 예산 예산 무상급식 국고지원 10만 민간등록금 예산 삭감, 양로동행금 인하 약속 실행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10만 광상세 없는 2013년 12월 31일 전 자영업세 부분 면세 · 12년 12월 31일 전 · 일반회계 전입 등 비정상적인 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복지 예산 예산 무상급식 국고지원 최소 1조원 이상 확대 민간등록금 실행 위한 고령교과서개발금 신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지원 확대 · 2013년 12월 31일 전 · 부차당세 완전 철폐

민주당 김진표 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일자리와 중소기업 예산을 삭감했다며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성장-복지' 선순환 정립 경기둔화 대응

복지분야 올해보다 5조 6000억 늘어

정부가 27일 발표한 내년 나라살림의 틀은 일을 중심에 두고 성장과 복지를 연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일자리가 최대의 복지'라는 정책기조에 따라 일자리를 만들어 복지를 향상시키고 경제성장도 이끄는 '일-성장-복지'의 선순환을 정립한다는 것이다.

◇내년 예산 326조원·올해보다 17조원 늘어=내년 예산안의 총지출 규모는 326조1000억원으로 올해 예산(309조1000억원)보다 17조원(5.5%) 늘었다. 예산은 227조원으로 올해보다 4.9% 늘었고 기금은 99조1천억원으로 6.9% 증가했다. 이는 지난 6월

에 각 부처가 요구한 규모인 332조 6000억원보다 6조5000억원 깎인 것이다. 내년 총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올해보다 9.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해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보다 4.0%포인트 낮다.

◇'4+1' 일자리 예산으로 '일-성장-복지' 선순환=내년 일자리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다. 올해 9조4679억원에서 6428억원(6.8%) 늘린 10조1107억원으로 잡았다. 분야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새로운 일자리 개척을 위해 4대 핵심 일자리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

고 사회보험료 지원을 더한 '4+1' 일자리 예산이 내년 나라살림의 핵심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4대 핵심 일자리 사업은 ▲청년 창업(5000억원) ▲고졸자 취업(6000억원)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1만2000개) ▲사회서비스 일자리(17만5000개) 등으로 예산 규모는 2조원으로 올해보다 6000억원(38.9%) 증가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은 저임금 근로자 122만명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3분의 1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 부담은 월 소득 100만원 기준으로 월 5만500원에서 3만3700원으로 떨어진다.

12대 분야별로 보면 복지(보건·노동 포함) 예산이 내년에 92조원으로 올해보다 5조6000억원(6.4%) 늘어나며 총지출 비중도 28.2%로 올해보다 0.2%포인트 높아진다.

◇재정건전성과 경기대응 '출타기'=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위기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순위에 뒀다.

정부는 올해 25조원인 적자 규모를 내년에는 14조3000억원으로 줄이고 2013년에는 흑자로 전환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줄지만 4대강 사업을 빼면 2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5% 늘릴 계획으로 경기대응에 노력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금 필요한 예산은 '태평성대 예산'이 아니고 '위기 극복 예산'으로 정부 예산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내년 초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예산을 2조원 이상 증액해 20만개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노후준비의 답은 하나!

연금복권 당첨되는 사람, 믿어 하나!

노년에 자식 덕 보는 사람, 열에 하나!

노후를 위해 꼭 만나야 할 사람, 하나!

은퇴를 금퇴로 만드는 연금술

하나은행 퇴직연금

7년 연속 코리아 베스트 프라이빗 뱅크 선정

- 최적의 연금제도설계부터 근로자 교육까지 일체형 컨설팅 제공
- 하나금융그룹의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맞춤형 컨설팅
- 인터넷, 콜센터, 전국 600여개 하나은행지점의 금융 전문 상담 서비스

* 퇴직연금은 예금보도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확정기여형 또는 개인퇴직계좌의 적립금에 인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모든 보호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예금보유금사기 금융기관별로 1인당 '최고 50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심의번호: (주)하나은행 종합금리인상 실시제 2011-1744(2011.09.07)